
정책참고자료

2017-10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조속 수습 지원	4
----------------------	---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조사 별인다	9
---------------------------------------	---

3 기획재정부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시상식 개최 - 청년 협동조합 창업 및 규모화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	11
---	----

4 교육부

전문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국권 최종선정 결과 발표	17
---	----

5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창업 역량 강화 추진	18
-------------------------	----

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문화기획자의 요람을 찾습니다 -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공모 -	22
--	----

7 농림축산식품부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23
------------------------	----

8 환경부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 한 곳에서 확인한다	27
--------------------------	----

9 고용노동부

고용패널 학생논문 공모전 수상작 4편 선정	30
-------------------------	----

10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발간	33
-----------------------------------	----

11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36
-----------------------------	----

12 해양수산부

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수립·발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39

국민안전처, 산불피해 조속 수습 지원

- 특별교부세 27억원 긴급지원 등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5월 6일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대책지원본부」를 가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산불대책지원본부」는 산림청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진화활동 및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이번 산불로 주택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소(全燒)주택에는 900만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주민의 요청시에는 임시 주거시설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전국재해구호협회 주관으로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이와 아울러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택 전소(全燒) 등 피해자에 대해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구호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국민안전처는 신속한 조기복구와 산불 추가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총 27억원(강릉 10, 삼척 10, 상주 7)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여, 산불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산불진화에 동원된 인력·장비비용,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특별교부세 49억 旣 지원(3.20)

- ☐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철저한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 성 * (가동) 2017.5.7. 08:00 ~ 위기경보「심각」단계 종료시까지

○ (본부장) 국민안전처 차관 / (실무반) 2개반 13명

□ 운 영

○ (시간/장소) 매일 09:00 ~ 21:00, 중앙대책본부 상황실

-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당일 근무자는 당일 08:30까지 상황실 도착하여 등록부 서명 후 전일 근무자로부터 업무 인수

※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대 근무자 대상 종합설명(반장, 09:00)

○ (상황파악) 각 반별 임무에 따라 반장 중심으로 수행, 파악된 상황은 상황총괄반을 통해 관계부처 등에 전파(상호 협력체계 유지)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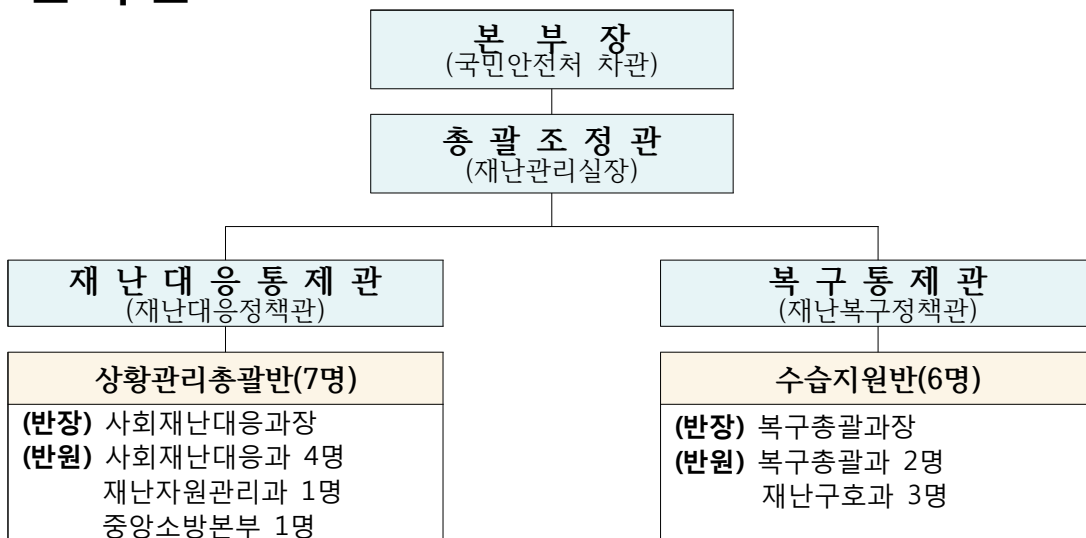
○ 「중앙산불사고수습본부」 협조·요청사항 협의 및 지원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진화 문제점 파악, 지원방안 강구

○ 진화 인력·장비 등 지자체 지원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 산불피해 응급복구 지원, 이재민 구호, 산불피해 합동조사 등

< 조 직 도 >



5. 6. 강원 강릉 산불 이재민 구호현황

- '17. 5. 6(토) 15:27 발생 /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281번지 일원 -

□ 이재민 수용 현황 (5. 7. 11:00 현재)

장소	대피인원(명)			급식지원	귀가예정 시기
	최초 대피	귀가	잔류		
합계	311	185	126		
강릉초 (체육관)	60	60	0	도시락 제공(강릉시)	아침식사 후 귀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131	34	97	죽 제공 (강릉자원봉사센터 밥차이용)	점심식사 후 대부분 귀가 예정
성산초등학교	120	91	29	급식 지원 (대한적십자사 밥차 이용)	주택 전소자 미귀가 등

□ 구호지원 현황

- 강릉시에서 응급구호세트 270개, 대한적십자사에서 23개 지급
 - ※ 전국재해구호협회 위탁(강릉시 소유)했던 구호세트 500개 강릉시에 전진 배치
- 구호용품 지급
 - 생수 980병(전국재해구호협회)
 - 민관협약 기업인 BGF에서 식·음료 등 지원(초코바 216개, 컵라면 214개, 소고기죽 96개, 생수 320개, 햇반 240개, 물티슈 210개)
- 구호상황 관리관 파견(국민안전처)
 - 재난구호과 장상준 사무관 등 2명(5.7, 08:00)

□ 향후 지원계획

-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검토(전국재해구호협회, 83동)
- 기부금품 모집 준비(5.7~) * 강릉시와 전국재해구호협회 모집 협의 중
- 심리회복지원 준비(5.8~) * 강원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전문가 인력풀(총 98명)

참고 3

강릉 성산 산불피해 지원 가능사항

구 분		지원기준		지원율	비 고
		지원대상	지원단가		
직접지원 (생활안정지원)	주거비	주택피해(전·반파) 세입자 보조	900만원(전파), 450만원(반파) 300만원이내(세입자)	지방비 100%	
		기타 주거 불가능, 정부 이주요구 등	150만원 이내 (기본 15일 최대 30일)		
	구호비	주택피해(전·반파)	8,000원(1일/1인) (전파 60일, 반파 30일, 기타 15일 등)		
		재난영향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교육비	생활안정지원 대상 가구의 고등학생	73만원(서울기준)		
직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공공시설 복구비	국가 및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	자연재난 복구단가 준용	지방비 100%	
	오염물/잔해물 처리비	대규모 오염·잔해물 처리 또는 방역·방제 등이 필요한 경우	실시비용	지방비 100%	
	특교세 지원	응급복구 장비·인력 이재민 구호 잔재물 처리비 등	-	-	
간접지원	관계법령에 따라 간접지원 서비스 기관에서 지원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등 원스톱서비스* * 한번의 피해신고만으로 각종 간접지원 혜택			(6개 항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보존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지방세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개별법	(재해구호법) -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 및 급식·생필품 지원 * 파주물류센터에 임시주거시설 83동,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500세트 추가 지원 - 재난관리기금 활용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기타) - 기부금 지원(구호협회에서 강릉시와 모집 협의 중) -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 소득·재산 고려				

※ 그 밖에 지원 필요사항(사망·부상자 보상금, 사유재산피해 보상 등)은 피해양상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일반재난지역) 또는 중앙대책본부회의(특별재난지역) 심의를 거쳐 탄력적 지원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조사 벌인다

28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행정심판 절차 본격 진행될 듯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중앙행심위는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혀 해당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케이블카 공사가 시행되고 곤돌라가 운행되면 문화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 (사업내용) 천연기념물 제171호('65. 11. 5. 지정)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에 오색케이블카(3.5km), 지주(6개소), 상·하부 정류장, 전망데크 및 산책로 등 설치(사업비 587억원)
- 199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2011년 이후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2015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조건부)을 받았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승인('15. 8. 28.) 시 부과조건 :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마련 등

그런데 양양군은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여러 기관이 관련된 만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사업 예정지역과 양양군청에서 이상민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사를 실시기로 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중앙행심위는 사업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도 청취한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된 사안인 만큼 현장을 방문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구술심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중앙행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시상식 개최 - 청년 협동조합 창업 및 규모화로 일자리창출 기반 조성 -

◇ 기획재정부는 '17.4.28(금)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내년까지 입상팀의 협동조합 창업 전 과정 지원

○ 협동조합 창업 및 사업 규모화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

* 대상: Yo(청년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최우수상: 당도리(청년협동조합가와 장년 대목장들의 일자리창출) 크레센도(Crescendo, 대학교 학생·교수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기획재정부는 4.28일(금) 서울 소셜캠퍼스 온(강동구 성수동)에서 「2017년 청년협동조합 창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청년들의 협동조합 방식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6년 청년 창업팀 공모전을 시범 실시한 이후, 올해는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16년 12개팀 → '17년 24개팀)

○ 지난 3월부터 전국 대학 등 17개 권역별 지역 설명회 개최 및 사전교육 등을 통해 총 70개팀이 응모하였다.

○ 이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37개팀에 대해 2차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 협동조합 이해도, 사업 모델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역량 등을 심사하여 총 24팀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대상은 Yo(청년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가 차지하였다.

<공모전 주요 입상팀 사업내용>

◇ 대상팀: Yo(청년협동조합형 프렌차이즈)

- 청년 안경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영리가 아닌 전문성**을 추구하며,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으로 안경시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 안경사들로 구성

* 안경점 근무시 최저 임금 및 초과근무 등으로 안경업 종사 청년층 감소
 * 청년 안경사들은 안경광학과 졸업생으로 안경사 면허 취득후 활동 가능하나, 현재 안경점은 전문성보다 영리중심 추구 경향

- 안경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형 프렌차이즈 확대로 소비자부담 증가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및 개인 소규모 매장 폐업 등, 청년 안경사들이 일하기 어려운 상황

- 협동조합을 통해 브랜드의 거품을 배제한 고품질 상품의 저렴한 안경을 판매하며 저비용으로 이윤 창출 추구

* ‘무명안경’ 타이틀로 최소 창업비용을 활용, 매장을 오픈하여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단가를 낮춰 수요자를 확보하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최우수상팀 1: 당도리(전북 전문 목공·인테리어)

- 청년 건축 사업가와 중·장년 목수가 함께 소통하는 목공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목공 인테리어, 도시재생 및 문화재 복원 등 지역사회공헌을 추구하는 청년 목공·인테리어 사업가로 구성

- 중·장년 목공의 전통 기술전수, 다양한 목공 분야의 전문성 확보로 목공사업 활성화, 관광 자원화(한옥건축, 문화재복원, 목공의 거리조성 등) 및 청년 목공 일자리 창출 등 추진

※ 청년들이 대목장 등 어려운 전문 목공분야 기피로 대목장 등 기술전수 어려움

◇ 최우수상팀 2: 크레센도(Crescendo)

- 현대인의 웰빙 만족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투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수원여자대학교 학생·교수들로 구성

* 학생 7명, 교수 3명, 직원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제조부터 마케팅까지 원스톱 진행

- 제과제빵, 비즈니스 등 대학 전공을 살려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저트 및 로컬푸드 시장 진입

* 설탕 대신 대체당 이용, 로컬 콩 및 견과를 활용한 빈투바(bean to bar) 초콜릿 제조·판매 등

- 협력과 소통으로 개인의 가치실현 및 지역사회 공헌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추진

□ 이번 공모전 입상자들은 교육·문화예술·외식·제조유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 협동조합에 적합한 구체적 사업계획들을 통해 일자리·수익창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을 추구하며 협동조합 창업 의지를 보였다.

- 특히 협동조합 방식 프랜차이즈*를 통해 청년층 고용안정을 활성화하고,

* 현재 성공한 외식사업가가 협동조합을 통한 프랜차이즈 운영으로 청년들에 사업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동조합 방식 프랜차이즈로 안경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등, 규모화·공정거래를 통해 안정적 고용창출

- 또한, 노량진 공시생 출신들이 느꼈던 음식에 대한 불만 해소 및 지역공동체 실현, 귀농·귀촌 청년(여성)들의 농촌경제활성화 이외, 문화예술 전공자 및 청년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협동조합방식의 창업을 계획하였다. (붙임 참조)

□ 입상팀들에 대해서는 업종별 전문성을 갖춘 협동조합*이 일대일 매칭되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창업의 전과정을 인큐베이팅할 예정으로, 올해 또는 내년까지 실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해피브릿지, 아이쿱생협, 사회적협동조합 신탁사회공헌재단 · 자바르떼 · 품앗이마을 · 티치포울산 · 코끼리 · 동행

□ 기획재정부 양충모 성장전략정책관은 “올해 공모전은 협동조합 방식의 창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사업 아이템과 사업계획을 가진 지원자들이 많았다”고 평가하고,

○ ‘협동조합 창업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인식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창업팀 공모에 이어 하반기중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2017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공모전 입상팀(24개)

수상명	팀명	팀 구성원	사업 계획		
			조직 형태	업종 업태	목적 및 사업내용
대상	Yo (경기)	안경사 (2명)	협동조합	제조 유통	○(목적) 합리적 가격의 안경 제작 및 안정적 근로환경 제공 ○(사업) 무명안경 제조·유통 등 저비용으로 이윤창출하며 청년 안경사 근로 여건 개선 (프랜차이즈 방식)
최우수 상	당도리 (전북)	목공, 인테리어 종사자 (2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조 유통	○(목적) 목공 산업, 마을 관광 조성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중·장년 장인 목수가 함께 (취약계층)교육, 목수 인테리어 사업 등
	크레센도 (경기)	수원여대 학생 등 (13명)	사회적 협동조합	외식	○(목적) 요식업 종사 청년들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기여 ○(사업) 웰빙 디저트(초콜릿) 제작 및 판매
우수상	소담소담 (서울)	요식업 종사자 (6명)	협동조합	외식	○(목적) 노량진 공시생 출신들이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웰빙음식 개발, 후배 공시생, 지역주민등과 함께하며 지역활동가 육성 ○(사업) 제철농산물 도시락 개발, 지역 커뮤니티 공간 운영, 청년 상인 발굴 등(프랜차이즈)
	바른주방 (경북)	청년 사업가 (4명)	협동조합	제조 유통	○(목적) 영세 소상공인 창·폐업 비용 최소화로 일자리 지원 ○(사업) 폐업제품(주방용품) 리뉴얼 등 자원 재활용 시장제공으로 창업비 절감(프랜차이즈 방식)
	농촌 말괄량이 청년들 (경북)	귀농·귀촌 여성 (4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조 유통	○(목적) 귀농·귀촌한 (여성)청년 경제활동기반 구축,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 농산품 제조 가공, 관광 문화사업 등 귀농청년 지원
	현완단검 (광주)	요식업 종사자 (2명)	협동조합	외식	○(목적) 청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 특색음식 '상추 튀김' 제조 판매(프랜차이즈)
장려상	아트로	디자인 등	협동조합	문화예술	○(목적) 문화예술 분야의 근무

수상명	팀명	팀 구성원	사업 계획		
			조직 형태	업종 업태	목적 및 사업내용
	후리덤 (충북)	문화예술 종사자, 학생 (5명)		교육	환경 안정화 및 고용창출 ○(사업) 문화예술 관련 교육 및 사업 활성화 지원
	편다아트 (울산)	공예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4명)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목적) 공예 종사자 협동으로 동반성장 및 사회가치 실현 ○(사업) 3D 첨단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공예 및 교육서비스
	크리에 이티브 로스터리 (서울)	바리스타, 수제맥주 제조자 (2명)	협동조합	외식	○(목적)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국내 농산품 재가공, 생산을 통한 맥주·커피 제조 (프렌차이즈 방식)
	청청 학교 (대구)	학생 및 청년사업가 (4명)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목적) 청소년, 청년중심 지역 사회학교로 진로성장 지원 ○(사업) 지역자원 활용, 청소년과 청년의 진로 탐구교육 서비스
	오픈 클래식 (광주)	문화예술 종사자 (3명)	협동조합	문화예술	○(목적) 클래식 플랫폼 개발 및 소외계층 클래식 보급 확대 ○(사업) 3D 프린터 시각장애인 악보 개발등 클래식 음악(악보집, 연주법, 워크숍) 플랫폼 개발
	손니음 (경기)	단국대 학생들 (5명)	협동조합	제조 유통	○(목적) 비 주류 예술가 발굴 및 자활근로자 일자리 창출 ○(사업) 예술작품 활용, 자활근로자를 통해 패션제품 및 소모품 제작
	더 스트레이트 (인천)	직업치료사 등 (5명)	협동조합	보건 사회복지	○(목적) 직장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련 치료사의 안정적 고용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사업) 치료사가 직장을 방문하여 자세교정 및 환경수정 제공
특별상	천안 청년들	문화예술 종사자	사회적 협동조합	임대업	○(목적) 지역 원도심 재생 및 문화예술 활성화

수상명	팀명	팀 구성원	사업 계획		
			조직 형태	업종 업태	목적 및 사업내용
	(충북)	(4명)			○(사업) 웨어하우스 및 웨어 오피스 운영
	크리에 이티브 톤 (대전)	메이커 관련 종사자 (3명)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목적) 사회적문제 해결위한 메이커 커뮤니티 구성 ○(사업) 적정기술 및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광주디자인 청년이 살린다 (광주)	스마트 벤처 졸업생 (3명)	협동조합	정보통신	○(목적) 지역기반 디자인 인프라 구축 전문 콘텐츠 생산 ○(사업) SW 융합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제작
	원원 네이티브 (부산)	영어교육 분야 종사자 (2명)	협동조합	교육	○(목적) 원어민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및 사교육비 절감 ○(사업) 원어민과 함께 공예, 놀이, 방문, 답사, 요리 등
	1896 graphy (대전)	문화예술 종사자 (2명)	협동조합	문화예술	○(목적) 지역문화예술 네트워킹 및 활성화 ○(사업) 지역 문화카페(영화, 음악, 미술, 로컬푸드) 운영
	오기 (대전)	학생 (2명)	협동조합	외식	○(목적) 자활근로자 등 취약 계층 고용창출 ○(사업) 로컬푸드를 활용한 점심 뷔페 서비스
	씨네클럽 FOFF (전북)	영화산업 종사자 등 (5명)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예술	○(목적) 관객이 만드는 영화제 및 관객 공동체 문화 형성 ○(사업) 관객 영화제를 바탕으로 영화매개(상영, 집필), 커뮤니티 시네마 활동 전개
	아카데미 쿵 부산 (전북)	강사 등 교육 종사자 (3명)	협동조합	교육 서비스	○(목적)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저비용, 양질의 교육 모델제공 ○(사업) 교육과정개발, 세미나, 부모교육, 강연 등 제공
	The imagine (서울)	청년 사업가 (2명)	사회적 협동조합	제조유통	○(목적) 청년 일자리 및 학생 장학금 지원 등 교육기회 제공 ○(사업) 패션물품 판매, 공유 공간 운영 등
	공간공유 팩토리얼 (인천)	문화예술 종사자 (7명)	사회적 협동조합	임대업	○(목적) 원도심 지역 재생 및 청년 플랫폼 구성 ○(사업) 패션물품 판매, 공유 공간 운영 등

전문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형 전국권 최종선정 결과 발표

- 총 5개교 최종선정

□ 추진경과

- 전문대 LINC+ 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 '17.2.28. (총 56개교 신청)
- 전문대 LINC+ 사업 정량평가 추진 : '17.3.14. ~ 3.16.
- 전문대 LINC+ 사업(산학협력 고도화형) 정성평가(서면·대면) 진행 : '17.4.26 ~ 4.28.

□ 전국권 최종선정 대학 현황

구 분	전국권 최종선정 대학명 (가나다 순)
수도권(2개교)	청강문화산업대, 한양여자대
충청강원권(1개교)	충남도립대
동남권(2개교)	경남정보대, 창원문성대

□ 향후 추진 일정

- 전국단위 선정 대학(5개교) 발표: '17.5.2.
※ 이의제기 접수 기간 7일 (5.2 ~ 5.15) 부여
 -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선정평가 : '17.5월 중
 -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최종발표* : '16.6.7(예정)
- * 총 20개 내외 대학 선정 예정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기술창업 역량 강화 추진

- 연구실의 우수한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 촉진(Lab to Market)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교육중심, 연구중심을 넘어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창업중심대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대학의 기술창업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 과학기술특성화대학 : KAIST, GIST, DGIST, UNIST, POSTECH 이상 5개

- 미래부는 그간 '과기특성화대학 기술창업교육 강화사업' 등을 통해 기술창업 교과목 개발, 모의창업프로그램 및 지역 네트워크 운영 등 대학의 창업기반 조성에 주력하였으며,
 - 올해부터는 대학별 기술창업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창업프로그램 신설·확대, 학사제도 개선 및 창업형기숙사 등 인프라 구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대학의 '과학기술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한다.
- 1971년에 설립된 KAIST를 시작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그간 연구중심의 대학 모델을 정착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최근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부족 이슈에도 국내 대학이 나아가야 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 각 대학이 제시한 올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모든 과기특성화대학은 학위논문을 창업 교과이수로 대체할 수 있는 KAIST의 K-Shool을 벤치마킹한 '창업 관련 전문석사과정(1년)'을 설치한다.
 - 또한, 기존에는 창업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던 창업휴학(최대 4학기)을

기존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창업 교과목(학부1과목, 석사2과목)을 필수 이수토록 하며, 창업 관련 부전공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마련한다.

- 한편, 교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교원의 임용 및 승진 시 창업 실적을 인정*하고, 교원이 창업(겸직)하는 경우에게는 강의면제 및 급여를 지급하며, 2개월 이내의 기술창업 유급연가 등을 제공한다.

* (예시) KAIST : (종전-단일트랙) 교육(30%), 연구(40%), 기여봉사(30%) ➡
(개선-산학협력트랙 신설) 교육(30%), 연구(10%), 산학협력(30%), 기여봉사(30%)

- 각 대학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창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KAIST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심화연구를 지원하고, 즉시 사업화 가능한 경우에는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Tech Startup R&BD 프로젝트*' 추진한다.

* (A트랙)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디어 발굴하여 심화연구 수행 지원(10팀)
(B트랙) 즉시 사업화 가능한 아이템 대상 시제품 개발 및 시장진출 지원(5팀)

- GIST는 기술·시장 전문가*를 연구실에 투입하여 연구자와 함께 기술검토, BM 작성, 시제품 제작, 투자유치 등을 주도한다.

* 투자설계, 글로벌시장 대응 및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거나, 직접 기술개발/시장분석/BM혁신/제품화까지 주도하는 인력

- DGIST는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자를 발굴하여 연구실 기술매칭, 1:1 멘토링과 함께 시장진출까지 지원하는 '비슬밸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창업자발굴(오디션방식) → DGIST 연구실 기술 매칭 → BM개발(1:1멘토링)
→ 디자인, 마케팅 등 서비스 제공(스타트업 바우처) → 투자연계(공개 IR)
→ 글로벌진출지원(미국 현지 제조기업, 엔젤 네트워크 활용)

- UNIST는 창업팀을 美 버클리 대학의 멘토링/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버클리 기술이전창업센터(SCET)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Bootcamp를 국내에서 개최한다.

* 학교 창업프로그램에서 발굴된 창업팀들 중 해외경쟁력 있는 팀을 대상으로 단순 교육 참여가 아닌 실제로 해당 시장을 이해하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

○ POSTECH은 美 NSF의 I-Corps를 벤치마킹하여 예비 기술창업자 발굴, 지원하는 'STEP-Corps 시장탐색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기업가정신, BM 이해 등 교육, 美 GW대학과 연계하여 현지 창업전문가의 시장성 검증, 포스텍 계약·동문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연계 등 창업 쏠주기 지원

< '17년 과기특성화대학별 주요 추진계획 >

대학명	주요 추진계획
KAIST	■ 기술창업프로그램 : Tech Startup R&BD 프로젝트, 스타트업 페스티벌 (포럼, IR 등), 초기 창업자 대상 창업시뮬레이션 지원 등 ■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융합전문석사과정(1년) 운영, 창업 관련 공통필수교과목 선정(석사 2과목, 학부 1과목), 교원 임용/승진 시 산학협력업적 반영, 창업지원공간 확충 등
GIST	■ 기술창업프로그램 :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기술/시장전문가)' 신규 선발, 창업아이템 고도화 및 지역 투자유치 지원 등 ■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학사학위논문을 기술창업 실적으로 대체하는 규정 개정, 창업한 교원(겸직)에게 강의 면제 및 급여 지급 등
DGIST	■ 기술창업프로그램 : DGIST 비슬밸리 스타트업 프로그램(연구실 보유 기술기반 창업지원), 지역대학 공동 기술기반 모의창업프로그램 등 ■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기술기반 창업석사과정(1년) 추진, 기술창업 유급연가 제도(2개월 이내) 도입 등
UNIST	■ 기술창업프로그램 : 美 버클리 대학의 멘토링/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지원, Lab to Market Project(보유기술 시제품 제작 및 후속 R&D를 지원) 등 ■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창업융합석사과정(1년), 학생·교원 등 대상 창업관련 비학위과정(8주), 스타트업 업무공간(Innovation kitchen) 구축 등
POSTECH	■ 기술창업프로그램 : STEP-Corps 시장탐색 창업교육 프로그램, 과매기 프로그램(창업교육 설명회, 창업캠프, BM모델 코칭 및 창업경진대회) 등 ■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예비창업자 대상 휴학제도 마련,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신설 등

□ 한편,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자율적 창업프로그램 구성, 학사제도 개선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사업*'을 금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 및 접수가 지난 4.28(금)에 종료되었으며, 5월 중 외부 평가를 통해 지원대학을 선정한다.

* 사업규모 : 3개 대학 총 15억원 (대학당 3~7억원 내외)

지역 문화기획자의 요람을 찾습니다

- 문체부,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2015년에 최초로 지정되었던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5개소)의 지정 기간(2년)이 올해 5월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15년 지정 기관(5개소): 광주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대전문화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서울문화재단 공동), 전북대학교

기존에 지정되었던 기관뿐 아니라 신규 지정을 원하는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은 모두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17년부터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지정 후 2년 동안 문화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천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문화전문인력 교육과정은 지역 문화현장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형 실무교육, ▲ 워크숍을 중심으로 한 강좌형 이론교육, ▲ 현장 사례연구 등 총 5개월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eric7729@korea.kr) 등으로 하면 되며, 접수 마감은 5월 30일(화)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역량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문화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의 ‘문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 2015년 시장규모 2조 3,291억원,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8.4% 성장 -

《 주 요 내 용 》

- ◇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 3,291억원('15년 기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11년 이후 연평균 8.4%의 큰 폭 증가세
 - 품목별 시장규모는 '15년 출하액 기준 홍삼제품(6,685억원, 38.6%), 개별인정제품(3,123억원, 18.0%) 순
- 국내 소비자 조사결과,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요 고려사항은 주요 원재료(원산지 포함, 35.7%)이며, 선물용으로 주로 구입(66.1%)하고, 비타민(27.4%), 홍삼(19.4%) 제품 등을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179억달러('15년 기준)로 추정
 - 일본은 '15년부터 사업자 책임하에 식품의 건강효과를 제품 전면에 표기할 수 있는 '기능성표시 식품제도'를 시행 중
 - '15년 446억엔에서 '16년 1,483억엔으로 3배 이상 시장규모 확대 전망
 -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 및 기능성표시 식품제도 도입으로 일상음식의 건강식품화 진행
- ◇ 농식품부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①기능성 농식품자원 통합 DB 구축, ② 기능성평가 지원센터 활용 원스톱 기능성평가지원체계 구축, ③R&D 지원 확대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현황) 국민들의 소득증대로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후생활이 중시되고 있다.

* 기대수명 : (1960년) 52.4세 → (2014년) 82.4세

- 이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검진율*(만 19세 이상)이 '07년 48.6%에서 '15년 61.3%로 증가하고, 아웃도어 산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최근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2015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 식품업계에서도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정의)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 원료를 인정함

- 국가별로는 다른 개념과 제도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미국(식이보충제), 유럽(식품보충제), 일본(보건기능식품), 중국(보건식품)

- (시장규모) 건강기능식품의 '15년도 국내 시장규모는 2조 3,291 억원으로, '11년 1조 6,855억원 이후 연평균 8.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2015 연평균성장률
총 출하액	13,682	14,091	14,820	16,310	18,230	7.4%
국내 출하액	13,126	13,507	14,066	15,640	17,326	7.2%
해외 수출액	556	584	754	670	904	12.9%
수입액	3,729	3,532	3,854	4,412	5,965	12.5%
국내 시장 규모	16,855	17,039	17,920	20,052	23,291	8.4%

※ 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1) 총 출하액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출하하는 금액 (국내 판매액+수출액)

2) 국내 시장 규모 = 국내 출하액 + 수입액

3) 연도별 적용 환율(원/1\$), 종가기준 대미 연평균 환율,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107.99원(2011), 1,126.76원(2012), 1,095.04원(2013), 1,053.12원(2014), 1,131.52원(2015)

-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삼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출하액이 6,68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개별인정제품* 순으로 나타났다.

*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된 원료(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

《연도별 품목별 출하 현황 (국내 출하액 기준)》

(단위 : 억 원)

품목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홍삼	6,980	6,294	5,627	6,093	6,685
개별인정제품	1,419	1,790	2,296	3,128	3,123
비타민 및 무기질	1,555	1,622	1,726	1,397	2,041
프로바이오틱스	278	373	618	1,214	1,320
밀크씨슬 추출물	-	-	308	676	698
알로에	691	687	628	565	530
EPA 및 DHA 함유 유지	-	-	-	-	474
가르시니아카보지아추출물	206	440	95	217	259
인삼	231	318	272	333	239
식이섬유	116	168	167	171	235

상위 10개 품목 소계	11,476	11,692	11,736	13,793	15,605
기타	1,650	1,815	2,329	1,847	1,721
합 계	13,126	13,507	14,066	15,640	17,326

※ 연도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식품의약품안전처

1) 2015년 상위 10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제품에 한함. 특히 홍삼 음료, 사탕 등 일반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 한 곳에서 확인한다

- ◇ 환경부, 5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 28개 유형의 국내 보호지역 2,320여 곳의 현황정보 통합하여 DB시스템 구축
- ◇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 통합, 공유를 통하여 다부처간 보호지역 관리정책 협업과 국제사회의 권고사항 이행성과 기대

□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에 대한 현황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보호지역(KDPA, Korea Database on Protected Area)’ 통합 DB관리시스템(www.kdpa.kr)을 5월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내 보호지역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 소관의 14개 법률에 의해 총 28개 유형, 2,320여 곳으로 소관부처에 마다 각각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은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통합·공유하여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개선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으로 추진됐다.

* 보호지역: 법률 등 효과적 수단을 통해 자연생태계, 문화적 가치 등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자 지정·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으로 정의(‘08. IUCN)

- 그간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던 보호지역 정보가 표준화되어 통합 관리를 시작하면, 통계분석에 필요한 보호지역 숫자와 면적, 공간정보(GIS) 등 현황정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기 때문에 국가 보호지역 비율(커버리지)을 산정하거나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번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5개 부처별로 각각 관리해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신속히 확인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 DB관리시스템에는 국내 보호지역 2,320여 곳 중에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보호지역 지정년도, 유형, 명칭, 면적 등 30개 정보*가 확보된 1,499곳의 보호지역 현황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 30개 정보 대표적 유형: 보호지역 지정년도 · 유형 · 명칭 · 면적, GIS(공간) 정보, 관리기관 및 관리유형,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 관리계획 여부, 행위제한 사항 등

- 또한, 보호지역 별로 지정면적, 위성지도, 중복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조회기능과 함께 국가 보호지역 면적 비율, 년도와 기간 별 변화추이 등에 대한 통계와 시계열 분석*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시계열 분석: 특정년도 또는 일정기간별로 보호지역별 면적, 개수 등의 현황 통계, 변화추이 등을 그림 · 그래프 · 숫자 등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말함

- 아울러, 여러 부처의 소관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목표 측정의 근간이 되는 세계보호지역 DB(WDPA*)에 제출 · 등재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 WDPA: 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로 UN · CBD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별 보호지역 비율 산정 시 필요한 공식자료 제공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에 등록된 1,499곳의 보호지역을 세계보호지역 DB에 제출하여 국가 보호지역으로 등재시킨 바 있다.

- 박연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해 오던 국내 보호지역 현황정보를 한 곳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 차원 또는 소관 부처별 보호지역 정책 추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붙임 1. 『한국 보호지역 통합 DB관리시스템』 구축내용.

구분	기능명	제 공 내 용
기본 · 상세 기능	① 지도조회	실시간 보호지역 비율, 지도보기(위성/일반), 확대/축소, 이미지 저장, 조회(속성조회, 이력조회, 중복지역 조회)
	② 레이어 관리	레이어* ON/OFF *(예) 국립공원 선택 시 국립공원 지도가 화면에 표시됨
	③ 지도이동	기관, 유형, 지역, 지정년도, 검색어 등 검색조건을 통해 검색된 결과 목록 중 원하는 보호지역으로 지도 이동
	④ 정보조회	기관, 유형, 지역, 지정년도, 검색어 등 검색조건을 통해 검색된 결과 목록 중 원하는 보호지역으로 지도 이동과 정보 조회
통계 분석	⑤ 면적비율	보호지역 면적비율(커버리지) 통계정보 조회
	⑥ 지정연도	보호지역 지정연도별 통계정보 조회
	⑦ 보호지역 유형	보호지역 유형별 통계정보 조회
	⑧ 거버넌스	보호지역 거버넌스별 통계정보 조회
	⑨ IUCN 카테고리	보호지역 IUCN 카테고리별 통계정보 조회
	⑩ 통계현황	WDPA 등재 보호지역과 미등재 보호지역 모두를 포함한 전체 보호지역 현황 통계정보 조회
시계열 분 석	⑪ 지정연도별 현황	사용자가 선택한 지정연도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을 지도화면에서 조회하는 기능
	⑫ 지정연도별 누계 현황	사용자가 선택한 지정연도 구간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을 지도화면에서 조회하는 기능
	⑬ WDPA 등재 버전	사용자가 선택한 WDPA 등재 버전에 해당하는 보호지역을 지도화면에서 조회하는 기능

고용패널 학생논문 공모전 수상작 4편 선정

최우수상에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유예 효과: 졸업 후 취업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선정

-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홍)은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학생논문 공모전’ 수상작 4편을 선정했다.
- 고용정보원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 고령화연구패널 등 고용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용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의 대학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논문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 ☐ 공모전 최우수상에는 이진이·유지현·강영민(한양대 대학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씨가 공동저자로 제출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졸업유예 효과: 졸업 후 취업 및 임금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 우수상(1편)에는 정성창·이가현(성균관대 대학원)씨가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뽑혔다.
- 장려상(2편)에는 양승민·김희주(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씨의 <한국 청년의 생애 첫 취업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생존분석>, 오영교(전남대 박사과정 재학)씨의 <잠재계층 분석방법을 적용한 대학생의 진로목표 달성 노력 유형분석>이 선정됐다.
- ☐ 최우수상을 받은 이진이·유지현·강영민 씨의 논문은 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를 활용해,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이 대학 재학중 선택한 졸업유예의 노동시장효과를 분석했다.
- 최근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대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는 졸업유예 등 대졸자의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이 노동 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논문은 “대졸 청년층들의 졸업유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학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재학 기간 중 취업준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또한 “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취업준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졸업 요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졸업유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 학생논문 시상식과 수상 논문 발표회는 고용정보원이 개최하는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5월 26일)와 함께 열린다.
- 이번 논문 공모전은 ‘16년 11월 ~ ’17년 1월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총 20편의 응모작 가운데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붙임 1. 고용정보원 고용패널 개요

- 패널조사 : 매년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정보를 수집하는 추적 조사
- 동일인물에 대한 반복적 정보 수집으로 조사대상의 시간적 변화를 관측해 정교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
 - 고용패널은 고용시장의 변동 추이 파악, 정책의 효과 분석, 고용 정책 수립 지원 등에 기여

구분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고령화연구패널
대상	15~29세 청년(2007년 시작)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과정 이수 졸업자(2005년 시작)	45세 이상 중고령자 (제주도 제외, 2006년 시작)
목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 기여	고학력 청년층의 직업별 노동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정부의 중고령층 고용정책 수립 지원
내용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	매년 새롭게 졸업하는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들의 구직활동, 일자리경험, 직업훈련, 자격증 등을 추적하며 노동시장 진입과 정착 과정을 조사	고령자의 노동공급 및 은퇴, 소득, 소비행태, 건강 및 사회보장제도 수혜 등에 관한 자료 조사
활용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행과정 및 노동시장 경로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 및 청년층 정책 자료로 활용	교육시장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분석, 직무불일치 분석, 인력수급모형 등 다양한 연구자료로 활용	고령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발간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간의 정부정책 및 조치, 국내외의 연구 성과 및 주요 활동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해 저술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5월 4일(목) 발간한다.
 - 보고서는 국민대 일본학연구소와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다.
- 보고서는 200여 쪽 분량의 본권과 각종 사료를 담은 별권 자료 1권으로 구성됐다.
 - 본권은 ▲ '위안부' 제도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 실태, ▲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정, ▲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 등을 담고 있다.
 - 별권 자료집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관련 역사·정치·외교 중요사료, 관련 국제사회 보고서 등이 수록됐다.
-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관계자들이 앞으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국회,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 메인 홈페이지 내 교육자료실에 게재(5.4(목) 9시부터 확인 가능)

-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크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학술적 견해와 입장을 모두 담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이번 보고서 발간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해 일반 국민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향후 ‘위안부’ 관련 논의와 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개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개요

■ **책자명**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 **구성** : 본권(총 9장) 및 별권 자료집 1권

* 자료집 : 역사 부문 중요사료, 정치·외교 중요사료, 일본군'위안부' 관련 보고서 및 국제사회 자료 등

■ **배포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및 유관기관 등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내 교육자료실에서 일반 국민 활용 가능

■ **주요 내용**

목 차	주요 내용
제1장 머리말	• 보고서 작성 의의, 추진 경과, 주요 내용 요약
제2장 일본군'위안부' 제도	• 제도의 정의, 성립과 운영 및 피해자 통계 등
제3장 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와 후유증	• 위안부 동원 실태, 피해 사례·증언 및 후유증 등
제4장 일본의 법적 책임	• 국제법, 국내법 상 일본의 법적 책임 및 가해자 개인의 책임
제5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및 대응	• 진실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일본 정부에 후속 조치 촉구,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 조치 등
제6장 일본 정부의 대응	• 진상 조사, 고노 담화, 역사교과서 기술 및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활동 등
제7장 시민사회 활동	•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 피해자 지원, 의회 결의안 채택 운동, 기념활동 및 국제 사회와의 연대 등
제8장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과 해결 촉구	• 국제인식의 확립, 국제사회의 대응, 권고 및 반응 등
제9장 위안부 문제 해결을 향한 힘로	• 외교쟁점으로서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검토, 한일합의 평가 및 화해·치유재단 활동 제언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11~6.21)

-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7.5.11.~'17.6.21.)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제도 개선
 -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② 기타 제도개선 사항

-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편입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지만,
-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하여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6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위해 적극 나선다

-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발표,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 등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년~21년)」에 기반하여, 여성 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각 전략별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성어업인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정책 실수요자인 여성어업인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대해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어업인 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여성어업인 포럼’ 및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여성어업인 간 관계망 강화에 노력한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되어 있는 ‘제1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는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작년 12월 설립된 이후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여성어업인 사기 진작 및 정책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단위 유일한 여성어업인 단체로, ‘96년 최초 결성(당시 수협부인회) 후 ’16.12.28. 사단법인으로 허가, 현재 회원수는 약 8,000여 명

▲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어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수산업협동조합법」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협 내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여성조합원 입지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 * 현행 수협법 제46조는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조합’에 한하여 여성임원 선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여성조합원 20% 이상인 조합’으로 적용 대상 확대

또한 근로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 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 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한다. 올해에는 특히 여성어업인의 작업 참여도가 높은 굴껍질 분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 전남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16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 개발 추진 중

▲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해 나간다. 올해부터는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까지 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어업인이 여성어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어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료 및 문화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어업인 질환 조사* 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 어가구성원(3,000가구)을 대상으로 매년 어업인 질환조사 진행(‘15년~)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수협에서 실시하는 어촌계장 교육 등을 통해 어촌사회에 널리 전파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완현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7년 시행계획 수립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제4차 기본계획의 1차년도 시행계획으로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구성

<'17년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체계>

비 전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

목 표

**업종별 여성어업인 단체 설립
('17) 0개 → ('21) 5개**

**어업인 후계자 / 어업경영자 중
여성 비중 확대(35%까지)**

3대 전략 및 9개 추진과제

①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① 관련 법령·제도 정비
- ② 거버넌스 확립
- ③ 정책 확산을 위한
연구 및 홍보 강화

②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 ④ 여성어업인 단체 활동 강화
- ⑤ 경제적 지위 강화 지원
- ⑥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 ⑦ 여성친화형 작업 기반 구축

③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 ⑧ 여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⑨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